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광주	062-453-4012
남동공단	070-4756-0119	전남서남	061-462-7177
경기	031-251-7095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안산/시흥	031-491-7097	포항	064-278-1339
서울	02-2636-2148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창원공단	0899-2090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부산/양산	051-637-7433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해시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6년 6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 2면 경제살리기는 재벌개혁에서 시작
- 3면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1만원'
- 4면 <단결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
- 5면 충북 노동자 실태조사

- 6면 이주칼럼, 공단 실태조사 결과
- 7면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8면 세계 1위 한국조선, 정말 위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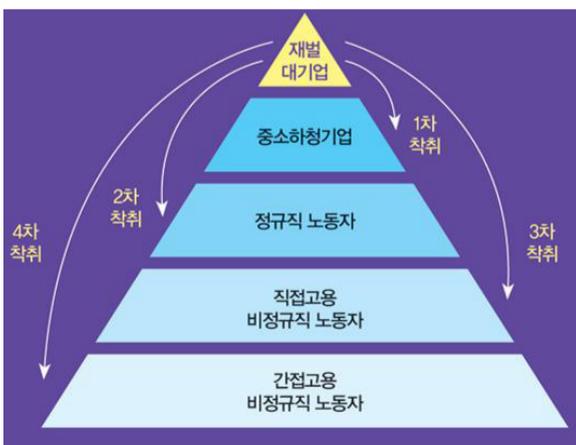


재벌개혁 한국경제 살리기 위한 유일한 특효약

그룹	사내유보금(원)	사내유보율(%)
삼성 (18)	196조 7,100억	3494.9
현대자동차 (11)	102조 1,500억	1654.1
SK (16)	53조 500억	738.3
LG (12)	42조 3,200억	598
롯데 (8)	27조 9,400억	4773.6
포스코 (7)	45조 3,000억	3485
현대중공업 (3)	15조 6,200억	2640.4
GS (8)	10조 3,200억	897.1
한진 (6)	2조 8,000억	155.5
한화 (7)	2조 8,000억	128.9
전체 (96)	503조 9,000억	1327.1

우리는 재벌기업이 시공한 아파트에 살고 재벌기업이 만든 가전제품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재벌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을 들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재벌기업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은 재벌계열사의 급식업체가 제공한 음식을 먹습니다. 퇴근 후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회식을 마치고 재벌기업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호재만 노리며 무분별하게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실패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다. 청년실업(5월기준 10.8%)은 점점 늘고 임금인상은 제자리 걸음해 노동자, 서민의 지갑만 얇아졌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반증하듯 신용카드빚과 담보대출을 늘려 생활하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가계빚 1,200조 시대) 하지만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한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이 생산해 독과점적으로 유통하는 재화비중이 국민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합니다. 30대 재벌로 시야를 넓히면 그 비중은 90%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며 노동자, 서민의 돈을 빨아들여 몸집을 불리는 재벌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세계경제가 가라앉으면서 한국경제도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당기순이익 중 세금·주식배당·투자 등을 뺀 현금과 각종 자산이 해를 거듭해 꾸준히 모인 부(富)를 말합니다. 재벌에게는 꾸준히 자산이 모이지만 노동자, 서민 생존은 오히려 벼랑에 내몰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를 개혁해 노동자,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입니다.

경제살리기 재벌개혁으로 시작합시다

1

재벌이라 쓰고

**황제갑질
유통공룡
살인기업**

이라 읽는다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주간 카드뉴스

민주노총

2



경영권으로 전 국민 막장 드라마 찍는 롯데
망공 때문에 비행기까지 돌리는 대한항공
돈 주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SK
운전기사 사이드미러도 못 보게 하는 대림산업

**다 말하기도 입 아픈
재벌 회장들의 갑질!**

민주노총

3



경제위기라더니 재벌총수는 성과급 잔치
가계부채 1,200조 재벌 곳간 1,200조
10대 재벌 곳간에는 549조
재벌 총수 일가 배당금은 9,500억

**그런데도 재벌만 배불리겠다고 노동개혁 추진!
국민 없는 박근혜 정권**

민주노총

4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문 닫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세상
골목 상권 다 잡아먹는 재벌복합쇼핑몰
중소기업 기술은 빼가고, 단가는 후려치고

**선거 때만 골목 시장 찾아가서
사진 찍는 건 그만!**

민주노총

5



좋은 일자리는 외면 비정규직만 늘리는 재벌
대법원도 불법으로 판결한 현대-기아
비정규직은 아직도 2만여 명
노동조합 만들면 표적 감시, 해고로 노조 무력화

**법 안 지켜도 솜방망이 처벌!
노동 없는 재벌고용부**

민주노총

6



소리없는 안방의 살인자 옥시와 대형마트 살군제
2015년, 재벌 대기업 사망 재해만 100건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업재해 책임 회피

**일하다 죽고 대기업 물건 사용하다 죽고
책임은커녕 발뺌만 일삼는 살인기업**

민주노총

7



재벌만 배불리는 사회,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제 당연한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살아봅시다**

민주노총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 늘리는 것의 포인트는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전체 1,000조 원 / 30대 재벌 710조 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회적 부가 재벌의 곳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돈이 재벌만의 것일까요? 그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면 충분히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중단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에도 중과세를 해 기업이 투자와 분배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 독식 구조를 막고 중소기업에 통해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공정부품단가도 보장해야 합니다. 재벌 내부의 부당내부거래와 불법 세습경영을 엄중하게 처벌해 막아야 합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 1%만 풀어도 월 200만 원 청년일자리 30만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120조 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노동자 87만명의 정규직화에 10조 4,400억 원, 45만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16조 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9조 5,000억 원이 듭니다. 700조 원이면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동 이어간다

최저임금 카드 뉴스 1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구요?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민주노총

2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일부를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나구요?

민주노총

3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좋은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민주노총

4

독일에서는

지난해 시급 8.5유로(1만300원)의 **최저임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저임금 나쁜 일자리인 미니잡이 200,800개 줄어든 반면 사회보험도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가 무려 713,000개 늘어났습니다

민주노총

5

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우울증 치료에도 특효약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 연구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6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기능과 소비자 구매력도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이 대선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

민주노총

7

최저임금 1만원 상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민주노총

8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NOW 지금 준비되었소~

저임금과 고용불안, 천만 비정규직 시대를 치유할 확실한 처방입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6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저성장·임금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세계적 추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세계적 추세다. 그 배경에는 세계 각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은 최저임금 시급 8.5유로(1만2천원), 호주는 16.87호주달러(약 1만6천원)이다. 중국은 27개 성 및 자치구에서 최저임금이 평균 17%가 올랐다. 캄보디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노동자들도 시위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

'소득 불평등 해소 없인 경제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독 한국만 이런 세계적 흐름에 비껴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최저임금 해마다 8% 올려 임기동안 40% 인상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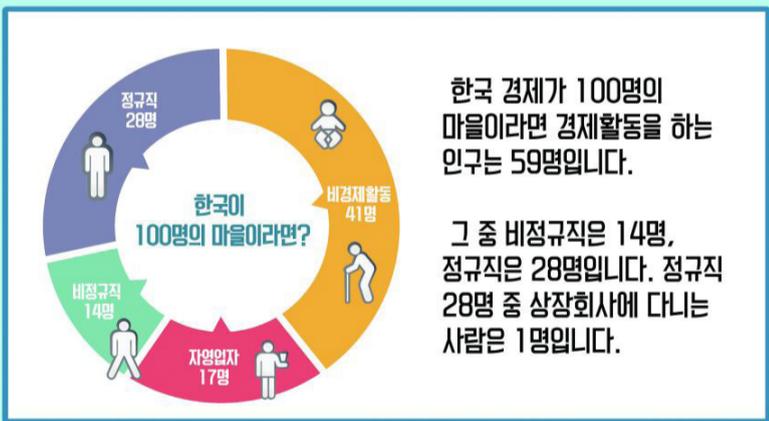
전국은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힘 모으는 중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요구를 쟁취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 토론회, 대시민 선전전, 서명운동, 걷기대회, 릴레이 기자회견, 릴레이 필리버스터, 최저임금 인상 투쟁 선포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충북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하세요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매주 화/금요일 청주지역(산업단지 근로자아파트, 산업단지 관리공단, 죽천교 통근버스 거점)과 진천지역 그리고 성모병원사거리 통근버스 이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다음 주까지 진행하고 6월24일(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을 진행하며 유용한 기념품도 같이 배포하고 있다. 공단노동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문제는 재벌! 부는 증가하고 책임은 모르시!
노동자 쥐어짜 번 돈은 재벌의 주머니로**



충북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울타리

충북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울타리'는?

충북의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지역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에 함께해 주세요!

-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 응답자분들의 정보는 보호되며 목적외에 쓰이지 않습니다.
- 응답해주신 자료는 지역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쓰여집니다.
- 실태조사 응답자 여러분들께는 준비된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실태조사 참여방법

- 오프라인 참여**
설문지를 나눠드리는 '울타리' 사업단 참가자들에게 오셔서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참여**
카카오톡 '호죽' 친구 찾기 후 공지 글 링크로 접속 혹은 옆 QR 코드 스캔으로 참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우산! 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안내

- 호죽노동인권센터 043-297-9596 전국공통 1577-2260
- 청주노동인권센터 043-296-5455
- 민주노총 충북본부 043-234-9595

3개월만 일하고 돌아가라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갑작스레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90일 이내 단기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도입절차의 불투명성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고용한 이주노동자들도 휴게, 휴일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최저임금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년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농번기에 들어오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이주노동자들의 처

우는 볼 보듯 뻘했다.

19명의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해 충북 괴산군의 절임배추 농가에서 한달 반을 일하고 돌아갔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체류기간 넘기는 사람 없이 전원이 출국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험실시 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언론은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타 지역에 비해싼 값에 절임배추를 출하한 괴산군의 보도자료를 받아 실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선전했다.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2천만원의 담보를 잡히고 나서야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인터뷰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 봐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이주노동자의 성공담으로 포장됐다. 괴산군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임금을 출국 시 일시불로 지급했다"는 설명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효과적인 체류관리를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3월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2차 시험실시를 발표했다. 대상 지자체는 네 곳으로, 도입 인원수는 124명으로 늘어났다. 올 하반기 마지막 시험실시 후 2017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도입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노동조건 감시 감독, 노동권과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아무 공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뿐이다.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정부부처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이주노동자를 모집 선발하고 있다. 계절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고 노동조건은 물론 산재와 건강보험, 숙소와 식사까지 고용주가 지킬 세세한 기준을 마련했다. 계절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해 노동권 침해 시 도움을 받게 하고 있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은 원하지 않는 가혹한 한국 자본주의가 법무부와 손을 잡고 또 하나의 괴물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사강 /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단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전국 7개 공단 노동자의
2016년 희망임금은
월 265만원 시급 10,172원**

민주노총이 전국 산업단지공단 중 중소영세사업장이 모인 7개 공단(서울구로, 의정부 용현, 안산 반월·시화, 대구 성서, 경남 웅상, 부산 녹산, 광주 하남)에서 점심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단노동자 1,291명이 이 조사에 응답했다.

**평균 주 48.9시간 일하고,
월 206.9만원 받아.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 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공단노동자 비정규직 비율은 42.4%.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28%, 파견노동자 비율은 9.5% 임시직 비중은 40.2%다. 공단노동자들은 평균 주 48.9시간을 일하고, 임금은 평균 한 달 206.9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6239.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일수록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기본급 비중과 시간당 임금 때문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2015년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자가 23.7%에 이르고 있고, 세부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악화를 경험

한 사례가 11.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8%, 각종 수당 삭감을 겪고 있다고 한 사례는 5.2%이다.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24.5%에 달하는 등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 공단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근로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임금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중소영세 공단노동자들의 희망 임금액은 평균 265.5만원. 시간당 임금으로 10,172원을 희망했다. 주 40시간 일하면 212.2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길 희망하고 있

다. 공단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92.8%가 생활하기에 자신의 임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2016년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91.3%가 올려야 한다고 조사됐다.

결론은 현재 공단노동자들은 현재의 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법정최저임금마저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생계를 지탱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안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을 일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거나, 둘째,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지급 등 고정급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거나, 셋째,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집단적으로 인상시키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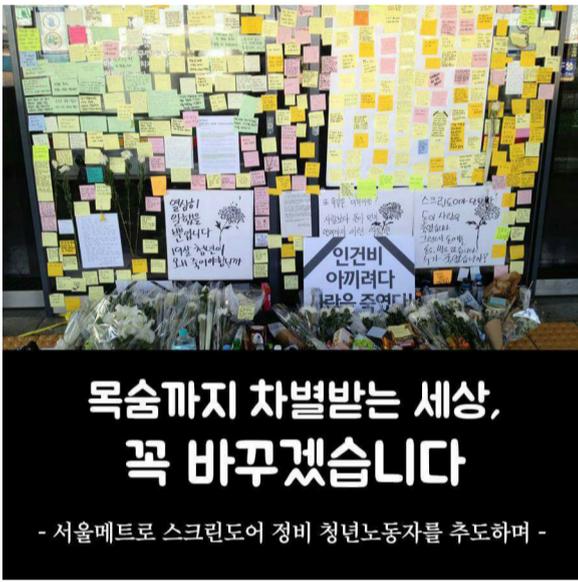
구의역 열아홉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구의역 열아홉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모 씨가 2016년 5월 28일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김 모 씨는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그대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더러운 시도에 맞섰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절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죠.
벼랑 끝에 몰린 서울메트로의 입장을 바꿔
“고인의 잘못은 0.1%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서 목숨을 잃었던 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아까운 그대를 잃지 않았을 텐데...
대책을 세우겠다면서도 여전히 '직역에 준하는 자회사'를
고집하는 서울메τρό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네요. 😞

데자뷰 같아요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는 내 모습...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전봇대에 오르는 동료들의 모습...
크고 작은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지역의 누가 떨어져 죽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두려움을 애써 지워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사랑값이 싸지면 목숨도 그렇게 됩니다

간접고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년 조사 결과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야”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 '유해위험작업', 2위 '임금수준이 낮아서'였습니다.
메탄올 중독사고로 실명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삼성전자 2, 3차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였어요.
당신이 떠난 나흘 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돈보다, 회사의 지시보다 스스로의 목숨을 우선시 할
용기를 얻은 것은 노동조합 덕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거부하고 다쳤을 땐 산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대도 삶을 바꾸는 실천을 해오셨죠. 여전히 싸움은 매번
힘듭니다. 진짜 책임자인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보면서
돈만 세고 있는 원청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밀려의 하청화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당신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남은 자의 몫을 이어가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배고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부디 명연하십시오.
2016. 06. 03
진짜사상 재벌책임 공동행동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안전업무 외주화 때문이다. 외주화의 대표적인 문제인 원-하청 간 갑을관계에서 오는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 지시,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서 오는 노동 강요, 단단계 관리·감독으로 인한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재 등이 이번 사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하청업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업무 외주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산하 외주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 안전업무와 상시고용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규직 전환은커녕 날이 갈수록 공공부문 간접고용과 외주화가 심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상시업무와 안전 보건상 유해한 위험 작업은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은 매뉴얼이 아니다. 2인 1조 업무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시간제한과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부족한 노동인력이라는 악조건에서 열아홉 청년은 홀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렸다.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 목숨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며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

세계 1위 한국조선, 정말 위기인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조선업 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과 생산시설 감축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내놓았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의 5월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14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82척,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2척,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 81척 등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잔량 부문에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왜 조선산업이 구조조정 타겟이 됐나?

조선은 세계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팽창과 미국 경제 회복 등이 맞물려 세계 무역량이 늘며 선박수요가 급증했다. 조선산업은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무역이 크게 감소하며 경기 침체로 상선 발주가 급감했다.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아 최근 7년 사이에 중형 조선사 50%가 폐업했다.

국내 빅3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2011년 이후에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며 심해 유전 개발에 뛰어들며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해양플랜트 공사를 대거 발주하고 나섰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소위 빅3가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등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해양플랜트가 현재 조선업계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유가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사의 인도지연 및 취소, 빅3간 과다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이 복합으로 작용해 빅3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만 8조 원이상의 적자를 냈다. 무능하고 부실한 경영진들의 과욕 탓이다.

생산설비 최소화하고 정규직 없애면 조선업이 살아날까?

우리나라 조선업 노동시장이 하청직원, '물량팀'(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충분히 유연화됐다. A조선사의 노동자가 5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중 정규직이 1만 명, 사내하청 2만 명, 물량팀이 2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숙련 기술직 노동자들의 존재 여부가 경쟁력인 만큼 정규직을 대거 구조조정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조선현장에서는 설비·인력 감축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발표시기가 총선 직후이고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정부와 금융권인 것도 의문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조선업 위기를 대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은 귀를 막았다. 호황기에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챙겨가던 경영진과 국책은행들이 위기에 직면해서는 설비 감축과 노동자 해고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작이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향후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직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듯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시즉생'의 각오로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일 뿐이다.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과 계획없이 산업재편을 추진하고 노동개혁의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 조선노동자들을 극도의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